

NEWS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전남, 전국 섬 60% 차지... ‘섬의 본고장’ 입증

“모든 산재 사망사고 직보”
이 대통령 업무복귀 첫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인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일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현행 국정상황실을 통한 공유·전파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더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 보고 체계를 상시화·체계화하라는 데 지시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노동자가 다치지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尹 오늘 내란재판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검토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11일 재판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특히 지난 7일 민중회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민중회 특검팀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완강한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강제구인 검토도 예고했다. 연합뉴스

총 3390개 중 2018개...관광·해양자원 전략 기초 마련
교통·안전·환경 등 통합 플랫폼 구축...지속 관리 예정

전국 섬이 3390개로 공식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2018개를 차지하며 전국 섬의 60% 가까이 보유한 ‘섬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처별·지자체별로 흩어져 혼선을 빚던 섬 통계가 국가 차원의 첫 통합 조사로 바로잡히면서, 전남의 섬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섬진흥원은 ‘섬의 날’인 8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섬진흥원 설립 이후 행안부·해수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첫 통합 섬 조사로, 유인섬은 주민등록법상 1인 이상이 주민등록된 섬, 무인도서는 해수면에 드러난 자연 형성의 무주거지로 각각 정의했다.

전국적으로 유인섬은 480개, 무인도서는 2910개로 집계됐으며, 전체 섬 거주 인구는 81만3475명(전 국민의 1.59%)이었다. 그중 전남은 유인섬 277개, 무인도서

1741개 등 총 2018개를 보유해 59.5%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남(555개), 충남(285개), 인천(192개), 전북(130개) 순이었다.

섬 거주 인구는 경남이 30만3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남 역시 15만59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21만4317명), 부산(10만8049명)과 함께 전국 상위권 규모다.

그동안 유인섬과 무인도서 관리 주체가 달라 중북·누락 통계가 발생하던 문제가 이번 조사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 섬진흥원은 유인·무인 전환에 따른 중북 제거, 연륙교 연결 여부, 여객선 운항 현황, 접근성 취약도 등 세부 데이터까지 확보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섬 통계는 주민 삶을 이해하고 미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이라며 “교통, 안전, 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원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6회 섬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천천히 돌아보고 싶은 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 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통계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결과를 지역 전략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섬은 국가방위와 해양자원 관리, 생태자원 보전뿐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등 다층적 가치가 크다. 특히 고령화·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 정책 실험지로서 전남 섬이 갖는 사

회적·경제적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섬진흥원 누리집(www.kidi.re.kr)에서 유인섬 공간정보와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섬진흥원은 지속적인 통계 정비를 통해 전남을 비롯한 섬 지역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6회 섬의 날 국가 기념식이 8월

오후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전국 섬 주민과 내외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자연과 사람, 세대를 잇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금타 화재 미해결 과제, 대응방안 지속 논의

민·관합동TF 정기 운영 종료...분과위원회 중심 현안 대응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던 ‘지역경제 위기 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이 정기회의를 마무리하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과 미해결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특별팀(TF) 제5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 전체회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전체위원회의 정기 운영을 종료하고, 앞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현안 대응과 미해결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전체 위원회를 추가로 열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체계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팀(TF)의 주요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난 7월 30일 발표된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에 따른 광주 1공장 재가동과 합평 신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금호타이어 화재 직후 출범한 민관합동특별팀(TF)은 경제, 고용, 환경·보건, 주민지원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와 관련기관,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경제분야에서는 인근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1913송정역시장 맥주페스타, 광산송정상생축제 등 축제 집중 개최, 광주시 전부서 및 공공기관 월 1회 이상 인근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 이용 등

소비촉진 운동을 펼쳤다. 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광주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2025년 하반기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만기 연장 및 신속 위기대응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정수유예 신청제도 안내 등 다양한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무료 노무상담 및 공감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업체 휴직 근로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고용안정대책을 펼쳤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 되나

국정기획위, 13일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 전방

국정기획위원회가 광주를 전국 최초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창근 국정기획위원회 재난안전소위 위원장은 8일 광주 서구 양동과 북구 신안동 수해 현장을 차례로 둘러본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가 설계됐다”며 “이에 따라 전형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50~80년 빈도 강우에 견디게끔 설계가 됐으나 이제는 기존 재난 시스템으로는 홍수를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 늦어지면 도심지는 침수나 홍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도시가 홍수에 취약한 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중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광주를) 홍수 예방을 위한 시범 도시로 지정해정보록 건

의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 등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수해 현장점검 내 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재난안전예방 시범도시 사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차 소비쿠폰지급 내달 윤곽
‘1인·맞벌이’ 특례 여부 쟁점

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전체 국민의 약 90%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세부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범위에는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되며, 최종 기준은 다음 달 10일께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가 참고될 예정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실제로는 전체 가구의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면 지원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을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공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